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정 응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

정웅

목 차

제1장 서론	307
제1절 연구의 목적	307
제2절 연구의 방법	309
제2장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주요 선행연구	311
제1절 치안과 경제 관련 실증연구	311
1. 범죄와 사회경제적 비용의 연구 사례	311
2. 범죄와 경제성장의 연구 사례	315
제2절 치안과 복지 관련 실증연구	319
1. 범죄와 사회복지 관련 연구 사례	319
2. 지역치안과 주민안전 연구 사례	321
제3절 선행연구의 평가와 시사점	323
1.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323
2.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324
제3장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향후 연구 방향	328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328
1. 조사 설계 및 설문	328
2. 분석 결과	331
제2절 향후 실증분석의 방향 및 연구모형 개발	343
1. 선행연구 및 설문을 통해 본 실증분석의 방향	343
2. 치안과 경제·복지 추정 모형의 개발	349

제4장 요약 및 결론 351

참고문헌 355

표 목 차

〈표 2-1〉 한국 치안에 대한 외래 관광객 만족도 추이 317

〈표 2-2〉 외래 관광의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추이 318

〈표 3-1〉 치안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성 정도 331

〈표 3-2〉 치안과 복지의 상관성 정도 332

〈표 3-3〉 치안 인프라 확대와 경제성과 기대 수준 333

〈표 3-4〉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복지성과 기대 수준 334

〈표 3-5〉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및 기대성과 335

〈표 3-6〉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연구의 필요성 336

〈표 3-7〉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찰 기능(범주형 다중응답) 337

〈표 3-8〉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찰 기능(순위형 다중응답) 338

〈표 3-9〉 치안총량 지표 개발 필요성 339

〈표 3-10〉 치안총량 지표에서 포함될 경찰기능 범주 340

〈표 3-11〉 자원 조달 방안 연구 필요성 342

〈표 3-12〉 기간별 법·질서의 준수 정도와 경제성장 손실 34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은 최근까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주변의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세계경제에서 그 비중을 확대하여 왔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3779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한 해 전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11위로 나타났다.¹⁾

이러한 경제 규모 확대에 불구하고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 한국의 사회·경제는 그 변동성(volatility)과 불안정성(unstability) 또한 증대되어 왔으며, 실제 세계적 경기회복의 지연 속에 국내 성장률의 점진적 하락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우리 사회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은 이른바 경제 살리기와 주민의 복지 확충에 보다 강조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도 대선 등 일련의 주요 정치과정에서도 실업난 해결과 경기 회복 등 경제 문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문제가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치안은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경제 활성화의 과제와 사회복지 확충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1)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Economy & Growth),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6. 10. 1 검색)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국가 목표인 ‘경제성장’과 ‘복지’를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이며, 국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안의 경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또는 사회복지 기여 효과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어려워 ‘경제성장’이나 ‘복지’ 예산에 비해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 불황 속에 청년실업 및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이에 비한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정부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정에서 치안 분야보다는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산업경제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 현안 및 여건을 감안할 때 치안은 국가경제의 장기적 경제성장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안전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경제와 복지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안의 역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치안과 경제, 치안과 복지 연구에 대한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 모형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우선 치안과 경제·복지에 관련된 연구물 특히 실증적인 연구물에 대한 자료 분석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실증연구 문헌 중에는 불법적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등을 주제로 한 국내의 주요 연구 외에도 범죄와 경제성장, 범죄와 지역사회 안전 복지 등을 다룬 외국의 문헌들을 포함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연구 외에도, 향후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탐색 및 연구 방향성 정립의 일환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치안과 경제·복지 상관관계라는 본 연구의 주제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설문 대상자로서 치안 및 경제, 사회복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의 연구가 일단 시론적이고 이론적 연구임을 감안하여 우선 치안 전문가 특히 경찰관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제한하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선행 실증연구 검토와 그 시사점을 찾기 위한 문헌연구, 그리고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치안과 경제·복지 상관관계 측정 및 경제효과 추정을 위한 본격적 계량모형 개발에 앞선 시론적 연구모형의 탐색 즉, 문헌연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연구 방향성 정립, 연구모형 시안 제시로 한정된다.

본 연구의 진행은 먼저 제2장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주요 선행연구에서 치안과 경제 관련 실증연구, 치안과 복지 관련 연구, 나아가 주요 선

행연구의 평가와 시사점 등을 다루고, 제3장에서 경찰관련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분석한 후에, 향후 실증분석의 방향 및 연구모형 개발 문제 등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설문을 통해 본 실증분석의 방향, 치안과 경제·복지 추정 모형의 개발 과제 등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제2장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1절 치안과 경제 관련 실증연구

1. 범죄와 사회경제적 비용의 연구 사례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에 치안과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연구는 한국의 경우 불법적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구 등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나²⁾,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 주요 구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 이후에서부터 다양한 범주와 분석 수준에서 많은 조사 보고 및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이미 1967년도에 대통령 법집행 및 사법행정 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가 연간 범죄로 인한 총비용⁴⁾이 10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1974년 12월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 는 연간 미국의 범죄대응 부담비용(annual crime

2)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논총, 치안정책연구소, 2008; 조경엽 외,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연구원, 2008.

3) David A. Anderson, “The aggregate burden of cri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2, No. 2, 1999, pp. 611-642.

4) 이 당시 보고된 총범죄비용(overall crime cost) 추정에는 범죄의 직접 비용(the direct cost of crimes against persons and property and expenditures on illegal goods and services) 외에, 경찰 및 사법제도 비용, 그리고 민간경비(public expenditures on police,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s and some costs of private prevention)이 포함되었다.

burden)이 288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발표하였다.⁵⁾ 또한 20년 뒤인 1994년에는, 콜린스(Sara Collins)가 앞선 *U.S. News and World Report* 조사(1974)를 업데이트하여 연간 미국의 범죄비용을 7280억 달러로 다시 추정한 바 있다.⁶⁾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5년 미국 국립형사원(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제드레스키(Edwin W. Zedlewski)가 총기류, 경호견, 상거래 안전 등 범죄에 관련한 비용지출에 연간 16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990년대에는 코헨(Mark A. Cohen)이 피해자의 범죄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살해위험 등 범죄피해자 비용을 연간 1130억 달러로 추정하였고(1990), 이후 1995년 코헨과 밀러, 로스만 등(Mark A. Cohen, Ted R. Miller, and Shelli B. Rossman)이 미국에서 강간, 절도, 폭력으로부터의 총 범죄비용이 연간 18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곧이어 다음 해 1995년에는 밀러와 코헨, 와이어세마(Miller, Cohen, and Brian Wiersema) 등이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폭력 및 재산 범죄로부터의 피해자비용이 연간 4720억 달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는 피해자의 범죄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삶의 질의 저하 요소 등을 포괄함으로써 폭행 범죄 피해자 비용에 대한 연구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미 사법통계국(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클라우스(Patsy A. Klaus)는 범죄 및 피해조사 서베이(the National Crime and Victimization Survey, NCVS)를 기초로 한 연구(1994)를 통해 미국의 연간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연간 190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범죄에는 강간,

5) *U.S. News and World Report* 의 범죄부담비용 추정치에는 195억 달러의 민간의 범죄예방 비용(private crime-fighting costs)이 포함되었다.

6)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범죄비용 추정에 대한 선행 연구는 David A. Anderson, 앞의 글, pp. 614-616을 참조.

폭행, 강도, 침입절도, 차량절도 등이 포함되었다.

1999년 앤더슨(David A. Anderson)은 직접적인 범죄비용 및 간접적인 범죄 비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죄수들에 이르는 기회비용까지 범죄비용에 포괄함으로써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총량적인 범죄비용 규모의 추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범죄비용은 1조 달러를 훨씬 넘는 1조 7050억 달러로서 그 비용 수준은 미국의 연간 생명보험 가입액(1조 6800억 달러), 은행권 저당 채무(1조 8530억 달러), 연간 건강비용지출(1조 380억 달러)에 비견할 만한 규모로 추정된다.⁷⁾ 또한 이러한 범죄비용 규모는 당시 미국 GDP의 약 11.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수준과 범주에서 범죄비용에 대한 조사보고 및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1998년, 영국 보험협회(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영국의 총범죄비용이 350억 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1999년 영국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보고서에서는 연간 총범죄비용이 500억 파운드에 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2000년 언론지 *Observer*의 보고서에서는 앞선 미국 앤더슨의 포괄적 범죄비용연구방법(Anderson, 1999)을 인용하여 영국의 연간 범죄비용이 6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⁸⁾

브랜드와 프라이스(Brand and Price, 2000)의 연구 사례의 경우에는 England와 Wales 지역에만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이 600억 파운드인 것으로 추정하였다.⁹⁾ 이 연구에 따른 범죄비용 규모는 앤더슨의 연구와 같이 범죄의 두려움이나 삶의 질(fear of crime or quality

7) David A. Anderson, 위의 글, pp. 629-630.

8) Sam Brand and Richard Price. "Section I: Introduction",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Home Office Research Study 217, Home Office, London (UK), 2000, pp. 5-6.

9) Sam Brand and Richard Price, "Executive summary", 위의 책, p. vii.

of life) 같은 주요 범죄비용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음에도 동시기 영국 GDP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8-2000년간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범죄비용을 350억 파운드에서 600억 파운드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기 다른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를 속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총범죄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영국도 미국의 연구 경향과 같이 다양한 연구 방법과 범주에서 연구 외연을 넓히고 심화시켜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 영미 국가 이외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에는 데토토와 바니니(Detotto and Vannini, 2009)가 이탈리아 범죄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용추정이 주목된다.¹⁰⁾ 이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전체 범죄 중 약 65%의 범죄에 대한 부분적 범죄비용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다른 범죄에서의 사회적 총비용만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영미의 실증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치안과 경제, 특히 범죄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크게,

1.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비용(물질적 비용),
2.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제도 운영비용,
3. 합법적(생산적) 경제활동 대신에 범죄를 선택함으로써 인한 기회비용,
4.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삶의 질 저하 등 간접비용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으며,

10) Claudio Detotto and Marco Vannini, "Counting the cost of crime in Italy", *Workshop on Applied analyses of crime: Implications for cost-effective criminal justice policies*, Porto Conte Ricerche, 26 October 2009.

그 연구 추세는 연구 초기에 단순히 범죄의 직접비용 또는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 운영비용 등으로부터 기회비용 및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주의 연구, 가장 넓은 수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 총량적 연구(general and aggregate study)로 발전되고 있다.

2. 범죄와 경제성장의 연구 사례

범죄가 발생시키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와 같이, 범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DI(1987)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이를 수 있었던 경제성장은 기간에 따라 0.99~1.08%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OECD 평균지수를 약 20% 정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국내적으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로부터의 교역 및 직접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범죄 다발 위험 지역에는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미의 경우를 보면 정부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마약 조직들이 활동하는 국가에는 해외 자본이 쉽게 들어가지려하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카르테나스(Cárdenas,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콜롬비아의 1980년대 이후의 경제(GDP) 성장률이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비하여 약 2%

11) 차문중,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173호, 2007, 8쪽.

정도 낮게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²⁾

즉 1980년 이후로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한 이유로 동 기간에 폭증한 범죄, 건전한 잠재노동력의 범죄관련 노동력으로서의 전환(공장노동 → 마약 생산 노동), 마약 밀매의 폭증으로 인한 갱단 사이의 전쟁·살인·폭력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불안 등으로 여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이불로에프와 샌들러(Gaibulloev and Sandler, 2008)는 1971년부터 2004년 사이에 국내 및 국제 테러리즘이 18개 유럽 국가들의 인구 1인당 소득 증가율(income per capita growth)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¹³⁾

위 연구에 의하면, 테러리즘은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인구 1인당 소득 증가율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국제적인 테러의 경우에는, 평균 0.4%의 추가적인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당시 대부분 유럽 국가의 성장률이 2%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성장 손실 또는 소득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Both transnational and domestic terrorism adversely affected income per capita growth in Western Europe during 1971–2004. The negative growth effects results, in part, from terrorism reducing growth... In the case of transnational terrorism, an additional incident per million people reduces economic growth by about 0.4 percentage points. At first sight, this seems like a huge effect since most countries grow on average by just 2 percent”(Gaibulloev and Sandler, 2008, p. 422).

12) Mauricio Cárdenas S., “Economic Growth in Colombia: a reversal of fortune?”, Working papers series–documentos de trabajo, 2007.

13) Khusrav Gaibulloev and Todd Sandler, “Growth Consequences of Terrorism in Western Europe”, *Kyklos*. Vol. 61, No. 3, 2008, pp. 411–424.

이러한 치안과 경제성장 또는 치안과 국민소득과의 관계와 같은 거시적 총량적 연구 외에도, 치안과 유통·물류서비스, 치안과 관광수지 등 국내 각 산업 부문별로 치안과의 상관관계 또는 각 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소메즈와 그라페(Sönmez & Graefe, 1998) 연구에 의하면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이 여행지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¹⁴⁾ 2002년 굿리치(J. N. Goodrich) 연구에 의하면,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테러 복구에 약 1050억 달러(115.5조원, 1\$=1100원 기준)가 소요되었고, 테러 직후에 항공사의 승객이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또한 호텔, 버스, 기차, 항만 등 모든 여행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⁵⁾

국내의 최근 사례에서도 외국 사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치안과 관광산업 간 관련 현상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치안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9%에 달하고 있다.

<표 2-1> 한국 치안에 대한 외래 관광객 만족도 추이(연도별)

(단위: %)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만족	90.9	90.9	87.2	86.2	74.2
보통	8.6	9.5	11.7	12.5	23.8
불만족	0.5	0.4	1.0	1.1	1.4

주: '만족'은 '매우 만족 + 만족'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258쪽.

14) Sevil F. Sönmez & Alan R. Graefe, "Influence of Terrorism Risk on Foreign Tourism Deci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5, No. 1, 1998, pp. 112-144.

15) J. N. Goodrich, "September 11, 2001 attack on America: a record of the immediate impacts and reactions in the USA travel and tourism industry", *Tourism Management*, Vol. 23, 2002, pp. 573-580.

아울러 3년 이내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표 2-2>에서 보듯이 2015년 방문자의 85.6%가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은 국내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부터 관광객을 유입하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표 2-1>과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치안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표 2-2> 외래 관광의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추이(연도별)

(단위: %)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만족	85.6	85.4	84.3	84.6	75.2
보통	11.5	11.9	13.2	12.5	21.4
불만족	2.9	2.7	2.4	2.9	3.3

주: '만족'은 '매우 만족 + 만족'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258쪽.

제2절 치안과 복지 관련 실증연구

1. 범죄와 사회복지 관련 연구 사례

범죄와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현 단계에서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추세에서 볼 때, 국가정책 목표로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 또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지향하는 이른바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과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계층분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타 경제정책(economic policy) 과제들 보다 시간적으로 지체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범죄와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자연스럽게 일반 경제 분야보다는 늦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의 실태와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를 도외시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치안과 사회복지 관련성에 대한 경우에 동일하다.

일찍이 마슬로우(Abraham Maslow)가 욕구충족 5단계 이론(Need Hierarchy Theory)을 통해서도 지적했듯이¹⁶⁾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Safety Needs)가 충족된 이후에 비로소 소속감과 애정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존경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선진 주요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추구하고 국가 정책의 근간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경제적인 욕구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16) Abraham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50, No. 4, 1943, pp. 370-396.

날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의 구현을 위해서는 마슬로우가 지적하다시피, 인간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에게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회적 욕구 나아가서 자아실현의 욕구도 충족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치안이 국가 경쟁력 및 경제발전(경제)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삶의 질(복지) 향상에 가장 기본적 요소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다 폭넓은 범주에서 범죄와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다룬 최근 연구 중에는 콜린과 쿨렌, 벤(Colvin, Cullen & Ven, 2002)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범죄와 사회적 부조(Social Support)는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이 연구에서 콜린 등은 “강압이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적 부조가 범죄를 예방한다(Coercion causes crime and social support prevents crime)”라는 일반이론의 틀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범죄 감소를 위하여 사회는 사회적 부조의 합법적 재원을 확대하고 강압적 요소들을 축소해야 한다“(to reduce crime, societies must enhance the legitimate sources of social support)는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집단 수준에서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부조가 잘 유지되면 대체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범죄율이 감소하는 곳이 주민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이 되며 그러한 지역은 복지가 더욱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Sweden)의 경우 범죄율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주민들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등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7) Mark Colvin, Francis T. Cullen & Thomas. V. Ven, “Coercion, Social Support, and Crime: An Emerging Theoretical Consensus”, *Criminology*, Vol. 40, No. 1, 2002, pp. 19-42.

2. 지역치안과 주민안전 연구 사례

앞서 지적했듯이 치안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반면, 복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는 사회발전 단계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삶의 질’의 향상의 근간이 무엇보다도 ‘안전한 삶’이라는 시각에서 치안과 복지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 단계에서는 치안과 복지를 매우 넓은 추상적 범주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현재 지역사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활동(지역치안)과 주민안전(안전복지)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현 가능한 치안과 복지의 상호관계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적 측면에서의 치안은 공공질서 측면보다는 지역주민의 체감안전과 안전복지 등으로 연결하여 이른바 “복지치안(welfare policing)”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외국 연구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복지치안 등의 범위에 취약계층 보호(노인, 아동, 여성 안전 등), 청소년 보호(학생 안전), 재난 안전 등을 포함시켜 폭넓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⁸⁾

198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리우와 세비지(Liou & Savage, 1996)가 지적하듯이 이른바 지역사회 경찰활동¹⁹⁾이 강조되어 왔다. 지역사회

18)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생/청소년 범죄, 범죄예방프로그램과 지역복지 관계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Afterschool Alliance, “Afterschool Programs: Keeping Kids and Communities Safe”, *Issue Brief*, No. 27. Washington, D.C. 2007; Abdiweli M. Ali & Willam Peek, “Determinants Of Crime In Virginia: An Empirical Analysis“, *Contemporary Issues in Education Research*, Vol. 2, No. 4, 2009, pp. 1-11; Damon Jones et al., *The Economic Return on PCCD’s Investment in Research-based programs: A Cost-Benefit Assessment of Delinquency Prevention in Pennsylvania*, The Prevention Research Center for the Promotion of Human Developmen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8.

19)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community-oriented policing,

경찰활동의 핵심 목표는 ‘삶의 질 향상’으로서, 단순히 범죄율을 낮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안심’ 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이 보다 넓은 안전서비스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주민과 가까운 경찰, 언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찰 등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처럼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약자 보호를 전개함으로써 경찰의 역할은 주민들의 안전복지 서비스와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치안의 구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주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복지에 큰 기여를 하며, 특히 노인과 아동 그리고 여성 등 지역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범죄피해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가 지역사회 복지의 내실화에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일찍이 1990년 초반 피크와 브래드쇼, 글렌서(Peak, Bradshaw & Glensor, 1992) 등이 지적했다시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가,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신뢰 및 협조의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고²⁰⁾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맥락에서 안전복지가 보다 강조됨으로써 지역사회 치안은 이른바 “복지치안(welfare policing)” 이라는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것이다.

community-based policing, problem-oriented policing 등 다양한 용어로 나타난다, T. Liou & E. G. Savage, “Citizen Perception of Community Policing Impact”,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0, No. 2, 1996, pp. 163-179, 특히 p. 164.

20) Ken Peak, Robert V. Bradshaw & Ronald W. Glensor, “Improving citizen perceptions of the police: “Back to the basics” with a community policing strateg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0, Issue 1, 1992, pp. 25-40.

제3절 선행연구의 평가와 시사점

1.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경우 치안과 경제와의 상관성 연구는 범죄와 사회적 비용,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특히 치안과 경제 관련 연구는 지역별, 범죄 유형별, 접근 방식별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의 총량적 접근(aggregate approach) 외에도, 관광과 물류 산업 등 산업부문별 영향 분석 등 다층적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치안과 복지 분야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세계경제사적 발전 단계에서 볼 때,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비하여 전국민적 사회보장체계의 확산이 후행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안과 경제성장 관련 연구보다는 다소 양적으로 적고, 또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보다는 다소 이론적 연구에 치우친 느낌이 있다.

이처럼 범죄에 대응한 치안과 경제·복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요 외국에서는 많이 시도되고 축적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교통비용 등 사회적 비용 연구 등 특정 분야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치안 여건이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관련 연구자·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²¹⁾

21) 본 연구의 자문에 응한 치안정책연구소의 다수 자문교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치안과 경제와 관계 대한 연구가 이처럼 지체된 원인 중 하나로 우리사회의 안정된 치안 여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치안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기반 확충을 위한 이른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²²⁾ 국민의 다양한 물리적 내지 비물리적 욕구 충족은 그에 합당한 사회간접자본이 충족되고,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산출물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²³⁾

예컨대 ‘안전’이라는 비물질적(immaterial)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서’라는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범죄로부터의 보호’라는 산출물(output)이 발생하여, 결국 ‘안전’이라는 비물질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한편 서구의 연구에서는 범죄비용 중에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의 비용지출을 주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유지와 같은 공공부분의 범죄대응 비용지출 외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시사한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치안한류의 추세에 즈음하여, 한국의 경찰 및 민간 치안역량 자체가 치안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도 착안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가. 치안의 조작적 개념정의(operational definition) 과제

치안과 경제 또는 치안과 복지 간의 상관관계의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경제와 복지의 측면에서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소득(National Income),

22)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서울, 1999;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별 SOC의 유형구분 및 재정규모 조사연구. 2012.

23)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책, 39쪽.

산업별 총생산물, 사회복지서비스 등 계량적 지표가 정비되어 있으나, 치안 측면에서는 체감안전도, 범죄율, 치안서비스 만족도 등 부분적인 지표가 활용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그 계량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치안’ 자체의 총량적, 조작적 개념정의가 어려울 경우, 외국의 실증연구 사례와 같이 불법집회, 지역사회 범죄, 마약, 교통, 정부부패, 또는 좀 더 넓은 범죄비용 등 계량화될 수 있는 각 치안 분야와 이에 대한 경제와 복지와의 관련성 연구(개별적, 부분적 연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상관관계의 인과관계 해석 오류의 극복

치안과 경제·복지 간 관계는 단순히 기술적인 상관관계를 넘어 양자간의 영향 관계, 인과관계를 내포할 수 있으며, 사실 이러한 인과 관계의 규명 나아가 그 이론을 통한 예측이야말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치안과 경제·복지 간 관계의 연구들에서 보면 양자 관계가 단순히 상관관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로 보고, 각종 경제적 지표내지 성과들을 종속변수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치안이 경제성장과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치안이 경제성장과 복지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의 오류는 주로 횡단면 자료(cross-section data)를 분석한 연구에서 동시성(simultaneity)과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등의 문제로 인해 증폭될 수 있으며²⁴⁾, 이러한 횡단면 자료 분석에서 발

24) Ehrlich는 일찍이 1973년도에 미국 주(state) 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Isaac Ehrlich,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생활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으로서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 분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패널 자료 분석이 활용된다면 횡단면과 시계열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가능하며,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의 문제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시계열 자료 분석 또는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치안과 경제성장, 치안과 복지 간의 장기적인 인과관계가 보다 타당성 있게 규명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⁵⁾

다. 치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치안산업²⁶⁾ 분야는 선진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경비산업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GDP가 증가할수록 대표적 선진국형 산업인 보안경비산업이 성장한다는 점은 이미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과 일본 등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국내 보안경비산업은 인접산업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선진국형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선발 국가인 일본의 GDP 대비 매출이 0.7%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²⁷⁾ 시장규모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3, 1973, pp. 521-565). 그의 분석 결과,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공히 제재확률과 형량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반면 Sjoquist(1973)는 미국의 시(municipality) 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제재확률의 증가는 명확한 범죄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형의 범죄억제효과는 부분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D. L. Sjoquist, "Property Crime and Economic Behavior: Some Empirical Resul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No. 3, 1973).

25) 한국개발연구원,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 6-7쪽.

26) 치안산업은 치안기술을 활용한 경찰의 장비·시스템 제조·개발 산업으로 정의된다.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2016. 4.

27) 일본의 경비산업의 GDP 대비 매출비율 0.7%는 삼성경제연구소(2009)의 보고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2013)의 한국 기업데이터 산업분석보고서(M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에 근

가 약 8조 9천억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2년 GDP 기준).²⁸⁾

공공 부문에서 경찰의 장비·시스템 제조·개발과 관련한 치안산업의 발전은 향후 위와 같은 민간 보안경비산업의 시장 확대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 경찰은 치안한류와 관련하여 해외 각국에 범죄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여타 범죄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 경비산업 분야에서 방법관련 장비 수출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바, 향후 치안한류에서 촉발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내적으로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조사서비스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급효과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치안산업 자체가 유발하는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분석 외에, 민간부문의 구체적인 세부 수요산업 및 고용규모·인력배치 등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거한 추정값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경비산업의 성장전략, 2009;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 기업데이터 산업분석보고서(M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2013.

28) 정웅, “한국 민간조사업의 전개와 법제화: 일본 탐정업으로부터의 함의”, 한국경영사학회 국제학술대회(일본 동경, 2014. 9. 12-13) 발표논문, 2014. 9.

제3장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향후 연구 방향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 설계 및 설문

가. 조사 설계

본 연구는 향후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방향성 및 연구모형 탐색의 일환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선 전문가 집단의 추출은 치안과 경제·복지 상관관계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서 볼 때, 치안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복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본 연구가 동 주제에 대한 최초의 시론적, 탐색적 연구임을 감안하여 우선 치안 관련 전문가로 한정하고, 또한 실증연구라기 보다는 이론적 연구임을 고려하여 경찰 관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즉 설문 대상자 sampling에서 치안 관련한 전문가 집단은 그 개념 규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²⁹⁾ 본 연구는 교육기관의 교수들로 조사 집단을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자

29) 치안전문가는 대학교 경찰 관련학과 교수, 치안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찰조직내의 현직 경찰(간부 또는 실무자), 경찰 유관기관 직원 등 극히 넓은 범주의 집단들이 전문가로서 포함될 수 있다.

를 추출하여, 이론 중심의 치안 연구자로서 전문가 집단의 동질성(homogeneity)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치안 관련 전문가 표본 추출 대상으로, 일반 사립대학 경찰 관련학과 교수 등만을 포함할 경우 지나치게 좁게 전문가 범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 교수 이외에 경찰교육기관(경찰대학 등)의 교수(요원)을 포함함으로써 균형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최종적 조사 대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관련)학과 현직 교수 31명³⁰⁾ 및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의 현직 교수(요원) 5명³¹⁾ 등 총 36명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조는 크게 1)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2) 치안과 경제·복지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분야 등으로 설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치안과 경제·복지 성과 간 상관성 문항, 치안(독립 변수)과 경제·복지(종속 변수)의 영향 관계 문항, 향후 치안과 경제·복지에 대한 실제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문항,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안 분야(세부 치안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문항, 경제의 GDP 개념과 같이 경찰의 종합적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문항, 종합적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할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관련 경찰 기능 등 지표 범주에 대한 문항, 그 외에 기타 치안 인프라에 소요되는 치안 자원 방안 연구 필요성 문항 등을 설계하고 이를 구조화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설문 문항지를 개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 문항 개발에는 연구 주제와 주제어들이 너무나

30) 치안 전문가 표본 추출 대상은 전국의 경찰(관련)학과 현직 교수로 하되, 추출 방법은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를 발간하는 전국 규모 학회에서 주요 임원경력 및 논문발표 등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교수 중, 약 30명 이내에서 편의 추출하였다. 추출 결과, 전문가 교수(31명)는 경기·강원지역 6명, 부산·경남지역 2명, 대구·경북지역 10명, 광주·전라지역 5명, 대전·충청지역 8명 등으로 분포되었다

31) 경찰대학 2명, 경찰수사연수원 2명, 경찰교육원 1명.

넓은 내용과 개념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명료한 이해와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 질문 항목 중 나타난 키워드에 연구자가 의도한 구체적인 단서설명 또는 개념설명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였다.

예컨대, 치안과 경제 간 총량적 관계 연구를 위한 치안총량 지표 개발에 대해 질문할 경우, 경찰의 치안총량 지표의 개념에 대한 설명(경찰의 인적, 물적 투입자원 총량 및 그에 따른 치안성과 총량 등)을 포함하도록 문항지를 개발하였다.

나. 설문 진행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는 총 36명의 경찰(관련)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2016. 8. 15~10. 15)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응답자 자신이 선택지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전문가 견해의 심층적 조사와 반영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면담 여건이 가능한 경우 설문 문항과 직접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 별지·온라인·유선 혹은 직접 면담 방식을 통한 개방형 조사를 병행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송부된 설문지 36부 전체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들은 모두 성실하게 작성되어 설문지 전체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었다.

2. 분석 결과

가.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및 기대성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및 기대성과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치안과 경제·복지 중에, 우선 치안과 경제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의 치안 및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치안과 경제적 성과 간 상관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서는 5=매우 높다, 4=대체로 높다, 3=보통, 2=약간, 1=(거의) 상관없다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치안과 경제적 성과 간 상관성에 대해 대체로 높다는 의견(4점)이 가장 많은 66.7%를 차지했고, 매우 높다는 의견(5점)도 19.4%를 점하여 전문가들은 양자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3-1> 치안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성 정도

상관 정도	빈도	퍼센트
보통	5	13.9
대체로 높다	24	66.7
매우 높다	7	19.4
합계	N=36	100.0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높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약간, 1=(거의) 상관없다.

다음으로 치안과 복지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치안과 지역사회의 복지 성과 간에 상관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서는 5=매우 높다, 4=대체로 높다, 3=보통, 2=약간, 1=(거의) 상관없다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치안과 지역사회 복지 성과 간 상관성에 대해, 치안과 경제적 성과 간 설문 의 경우와 같이, 대체로 높다는 의견(4점)이 가장 많은 44.4%를 차지했고, 매우 높다는 의견(5점)도 27.8%를 점하여 전문가들은 치안과 복지에 대해서도 양자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보통 이하로 평가한 경우가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경우보다는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3-2〉 치안과 복지의 상관성 정도

상관 정도	빈도	퍼센트
약간	2	5.6
보통	8	22.2
대체로 높다	16	44.4
매우 높다	10	27.8
합계	N=36	100.0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높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약간, 1=(거의) 상관없다.

[치안과 경제·복지의 기대성과]

다음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에서 더 나아가 향후 우리 사회에서 치안 인프라(경찰인력, 장비 등) 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이 확대될 경우, 경제적 성과 내지 복지 성과가 제고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치안과 경제적 성과의 기대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에게 “향후 우리 사회에서 치안 인프라(경찰인력, 장비 등)가 확대될 경우, 경제적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서는 5=매우 높아질 것, 4=대체로 높아질 것, 3=보통, 2=약간, 1=(거의) 영향이 없을 것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치안 인프라 확대와 경제적 기대성과에 대해 대체로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4점)이 가장 많은 69.4%를 차지했고,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5점)도 13.9%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치안 인프라 확대에 상당히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3-3> 치안 인프라 확대와 경제성과 기대 수준

상관 정도	빈도	퍼센트
(거의) 영향 없을 것	1	2.8
약간	3	8.3
보통	2	5.6
대체로 높아질 것	25	69.4
매우 높아질 것	5	13.9
합계	N=36	100.0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높아질 것, 4=대체로 높아질 것, 3=보통, 2=약간, 1=(거의) 영향이 없을 것.

다음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복지 성과의 기대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에게 “향후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이 확대될 경우, 지역사회의 복지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5=매우 높아질 것, 4=대체로 높아질 것, 3=보통, 2=약간, 1=(거의) 영향이 없을 것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와 지역사회의 기대복지성과에 대해 대체로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4점)이 가장 많은 44.4%를 차지했고, 매

우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5점) 역시 38.9%로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에 상당히 높은 복지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기대 성과와 대비할 때 보다 더 높은 기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치안의 기대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3-4>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복지성과 기대 수준

상관 정도	빈도	퍼센트
(거의) 영향 없을 것	2	5.6
보통	4	11.1
대체로 높아질 것	16	44.4
매우 높아질 것	14	38.9
합계	N=36	100.0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높아질 것, 4=대체로 높아질 것, 3=보통, 2=약간, 1=(거의) 영향이 없을 것.

이러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및 기대 성과에 대한 견해들은 다음 <표 3-5>의 전체적인 평가비교에 잘 드러난다.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경제(M=4.06)가 복지(M=3.94) 보다 높은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치안 역할의 확대에 따른 기대성과에서는 역으로 경제(3.83) 보다는 복지(4.11)에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즉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복지가 경제 보다는 치안과의 관련성이 다소 적지만, 향후 경찰활동을 통해 성과가 제고될 여지가 많은 분야는 지역사회의 안전복지라는 것이다.

<표 3-5>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및 기대성과

	N	최소값	최대값	M	SD
치안-경제 상관성	36	3	5	4.06	.583
치안-복지 상관성	36	2	5	3.94	.860
치안-경제 기대성과	36	1	5	3.83	.878
치안-복지 기대성과	36	1	5	4.11	1.008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높음, 4=대체로 높음, 3=보통, 2=약간, 1=(거의) 없음.

나.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연구 필요성

전문가 설문조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치안과 경제 또는 치안과 복지의 상관성 연구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에게 “치안과 경제(또는 복지) 간 상관관계가 현재 경찰학계의 주요 연구 주제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각 질문에 대해서는 5=매우 높다, 4=대체로 높다, 3=보통, 2=약간, 1=(거의) 필요없다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치안과 경제 또는 치안과 복지의 상관성 연구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평균값이 4.42, 4.33로 나타나 높은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치안과 복지 관련성 보다는 치안과 경제의 상관성 연구의 필요성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편차 값도 낮아, 치안과 경제의 상관성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내 그 필요성과 합의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6〉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연구의 필요성

	N	최소값	최대값	M	SD
치안-경제 상관성 연구 필요성	36	1	5	4.42	.874
치안-복지 상관성 연구 필요성	36	1	5	4.33	1.095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높다, 4=대체로 높다, 3=보통, 2=약간, 1=(거의) 필요 없다.

다. 경찰기능과 경제성과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중에 경제적 성과에 우선권을 둔다고 할 때, 치안 분야 중 경제성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경찰 기능 중 세부 분야로는 생활안전, 강력범죄, 지능범죄(사기 등), 공공범죄(부정부패 등), 경비(불법집회시위 등), 교통(사고 등), 국제성범죄(외국인범죄, 자금세탁, 산업기술유출 등), 보안, 기타의 9가지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 설문은 우선 경찰의 각 기능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를 세 가지 분야로 제한한 후 선택하는 경우를 설정하여 다중응답하게 하였다.

집단 설정 후 범주형으로 처리된 다중응답 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정부패 등 공공범죄 분야로 나타났다(23.1%). 그 다음으로 생활안전 분야(18.5%), 사기 등 지능범죄(13.9%), 자금세탁/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 범죄(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력범죄, 경비, 교통 등이 8-9%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안 분야는 극히 적은 비중을 보였고, 기타(관광 안전관리) 등도 제시되었다.

〈표 3-7〉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찰 기능(범주형 다중응답)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경제영향치안a	생활안전	20	18.5%	55.6%
	강력범죄	10	9.3%	27.8%
	지능범죄	15	13.9%	41.7%
	공공범죄	25	23.1%	69.4%
	경비	9	8.3%	25.0%
	교통	10	9.3%	27.8%
	국제성범죄	15	13.9%	41.7%
	보안	3	2.8%	8.3%
	기타	1	.9%	2.8%
합계		108	100.0%	300.0%

a. 집단 설정

주: 기타는 응답자의 직접 의견으로서 관광경찰 등 관광·쇼핑객 안전 관리 분야.

위에서 보듯이 공공범죄 분야가 최우선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투명성 요구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생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와 지능범죄 분야는 우리사회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세탁/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 범죄가 지능범죄(13.9%)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개방형 경제구조를 반영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한편 범주형으로 처리된 다중응답 분석과 달리, 선택된 세가지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가중치(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두어 이분형으로 분석된 결과를 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찰 기능(순위형 다중응답)

		생활 안전	강력 범죄	지능 범죄	공공 범죄	경비	교통	외사	보안	기타
N	유효	36	36	36	36	36	36	36	36	36
	결측	0	0	0	0	0	0	0	0	0
평균		1.25	.50	.89	1.47	.53	.33	.89	.14	.03
합계		45	18	32	53	19	12	32	5	1

주: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순위형 다중응답 분석에서도 범주형 분석에서와 같이 경제 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공범죄 분야로 나타났다(M=1.47). 그 다음으로 생활안전 분야(M=1.25), 사기 등 지능범죄(M=0.89), 자금세탁/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 범죄(M=0.89)의 순서를 보임으로써, 분석 방법을 달리하였음에도 경찰의 각 기능 분야별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치안 총량지표 개발 및 지표 범주

치안과 경제의 상관성 연구과정 중에 기본적 연구 중 하나인 치안과 경제 간 총량적 관계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경제의 GDP 개념과 같이 경찰의 종합적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또한 이 설문에서는 경찰의 치안총량 지표 개념에 대해 “경찰의 인적, 물적 투입자원 총량 및 그에 따른 치안성과 총량”으로 정의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서는 5=매우 높다, 4=대체로 높다, 3=보통, 2=약간,

1=(거의) 필요없다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하여 평균값이 4.33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높은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3-9> 치안총량 지표 개발 필요성

개발 필요 정도	빈도(N=36)	퍼센트
(거의) 필요 없다=1	1	2.8
약간=2	2	5.6
보통=3	1	2.8
대체로 높다=4	12	33.3
매우 높다=5	20	55.6
M=4.33 SD=.986		

한편 종합적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할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관련 경찰 기능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질문하였으며,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표시하게 하였다.

치안총량 지표 개발을 위한 경찰 기능의 범주로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찰 기능에서와 같이 생활안전, 강력범죄, 지능범죄, 공공범죄, 경비, 교통, 국제성범죄, 보안, 기타의 9가지 분야를 제시하였다.

범주형으로 처리된 다중응답 분석과 달리, 본 설문 문항은 기능 숫자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에 의해 임의 선택된 이분형 다중응답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보면 <표 3-10>과 같다.

<표 3-10> 치안총량 지표에서 포함될 경찰기능 범주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지표범주 ^a	생활안전	31	15.6%	88.6%
	강력범죄	26	13.1%	74.3%
	지능범죄	26	13.1%	74.3%
	공공범죄	29	14.6%	82.9%
	경비	21	10.6%	60.0%
	교통	27	13.6%	77.1%
	국제성 범죄	24	12.1%	68.6%
	보안	14	7.0%	40.0%
	기타	1	.5%	2.9%
합계	199	100.0%	568.6%	

a. 값 1에서 표로 작성된 이분형 집단입니다.

주: 기타는 타 기관 협조의뢰 업무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할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경찰 기능들에 대해 이분형으로 처리된 다중응답 분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안전 분야로 나타났다(15.6%).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 등 공공범죄 분야(14.6%), 교통 분야(13.6%), 사기 등 지능범죄(13.1%), 강력범죄(13.1%), 자금세탁/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 범죄(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보안이 7%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타 기관 협조의뢰 업무) 등도 제시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할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경찰 기능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찰 기능들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찰 기능에서는 공공범죄 분야가 1순위, 생활안전이 2순위였으나, 치안총량 지표 개발에 필수

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경찰 기능에서는 생활안전이 1순위(15.6%), 공공범죄 분야(14.6%)가 2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찰 기능에서는 지능범죄, 국제성 범죄가 공공범죄, 생활안전 분야와 같이 상위그룹에 포함되었으나,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경찰 기능들에서는 후순위 그룹에 있던 교통 분야(13.6%)가 중요하게 꼽힌 외에, 지능범죄(13.1%), 강력범죄(13.1%), 국제성 범죄(12.1%) 등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다만, 보안의 경우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찰 기능에서와 같이 낮은 중요도(7%)를 보였다.

이처럼 치안총량 지표 개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경찰 기능에서 생활안전 분야(15.6%)가 가장 중요시되고 그 외에 공공범죄(14.6%), 교통(13.6%), 지능범죄(13.1%), 강력범죄(13.1%), 국제성 범죄(12.1%) 등이 고르게 분포된 결과는, 치안 본연의 기능이라는 시각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판단된다.

즉 치안이 경제적 성과라는 부분적 관련성 측면에서는 비록 공공범죄와 생활안전, 지능범죄, 국제성 범죄 등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치안 총량지표라는 종합적 지표 개발에서는 경찰의 전반적 기능들이 균형적으로 포괄되는 것이 마땅하다.

마. 치안 인프라 자원 조달

치안의 역할 확대를 위한 치안 인프라 소요 자원 조달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게 “치안 인프라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공차원의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를 질문하였다. 또한 이 설문에서는 공공 차원의 별도 자원 조달 방안으로 치안세(police tax),

치안채권(police bond), 치안기금(police fund)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서는 5=매우 높다, 4=대체로 높다, 3=보통, 2=약간, 1=(거의) 필요없다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하여 평균값이 3.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3-11> 재원 조달 방안 연구 필요성

연구 필요 정도	빈도(N=36)	퍼센트
(거의) 필요 없다=1	3	8.3
약간=2	1	2.8
보통=3	6	16.7
대체로 높다=4	10	27.8
매우 높다=5	16	44.4
M=3.97 SD=1.230		

특히 필요 정도에서 매우 필요성이 높다고 본 응답(5점)이 4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연구 필요 정도에 대하여 약간 필요(2.8%), 필요없다(8.3%) 등의 소극적 의견들도 있었으며 그에 따라 편차(1.230)도 치안총량 지표 개발 필요성 경우와 달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안 재원이 이미 국가 일반예산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원, 치안 목적만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³²⁾

32) 공공 차원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수도권 A교수: 별도로 세목을 만드는 것 보다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 경찰교육기관 B교수: 특별회계를 가급적 만들지 않으려는 정부의 기조 상, 재원조달과 관련한 특별회계 창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제2절 향후 실증분석의 방향 및 연구모형 개발

1. 선행연구 및 설문을 통해 본 실증분석의 방향

앞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본 실증분석의 방향은 ① 분야별 연구와 거시적(종합적) 연구의 병행, ② 치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착수로 생각된다.

첫째, 치안과 경제·복지 간의 연구는 분야별 연구와 거시적(종합적) 연구가 병행되어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 치안과 경제와의 상관성 연구는 범죄와 사회적 비용,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특히 치안과 경제 관련 연구는 지역별, 범죄 유형별, 접근방식별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의 총량(aggregate) 접근 외에도, 관광과 물류 산업 등 산업부문별 영향 분석 등 다층적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총량적 접근으로의 급작스러운 편중보다는, 우리나라의 연구 수요에 맞는 연구 즉 시의성이 있는 정책연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된 기존의 불법집회시위 연구 사례와 같이³³⁾ 공공범죄, 강력범죄, 재산범죄,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성

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주요 강력·재산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을 약 158조원(2008년 기준)으로 추계함, 박경래 외,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치안정책연구소는 2006년 집회시위의 총 사회적 비용을 약 6조원(합법시위 4,100억원+ 불법시위 5조5천억원)으로 추계함,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논총, 치안정책연구소, 2008;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경제적 손실을 1조9,228억원으로 추정함, 조경엽 외,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연구원, 2008.

장에 미친 영향 등 주요 치안 분야별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분야별 치안 분야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경찰 기능의 범주분류와 우선순위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부패 등 공공범죄, 사기 등 지능범죄, 산업스파이 등 국제성 범죄 각 분야별로 연구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치안과 경제·복지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장기 시계열 자료 또는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치안과 경제성장, 치안과 복지 간의 장기적인 인과관계가 보다 타당성 있게 규명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정비 및 준수 정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의 법제도 정비·준법 수준이 경제의 성장을 훼손한 것으로 분석한 KDI(1987) 연구가 대표적인 종합적·거시적 연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OECD 평균지수를 약 20% 정도 하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경제성장은 기간에 따라 0.99~1.0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4) 차문중,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173호, 2007. 8;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였을 경우(실제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OECD 평균지수를 약 20% 정도 하회) 추가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경제성장은 기간에 따라 0.99~1.0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3-12〉 기간별 법·질서의 준수 정도와 경제성장 손실

기간	1991-2000	1991-2001	1991-2002	1991-2003
평균 법·질서 지수				
한국	4.4	4.3	4.3	4.3
OECD	5.5	5.5	5.5	5.4
성장손실(%포인트)	0.99	1.08	1.08	0.99

자료: 차문중,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173호, 2007. 8쪽.

이러한 법·질서의 준수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시적 연구 사례를 발전시켜 향후 치안 개념의 구체적인 포함 요소로서 공공범죄(부패), 지능(사기), 경비(불법시위), 교통 등을 체계적으로 포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같은 종합적 연구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즉 법·질서의 준수라는 모호하고 유동적인 의미 범주로부터, 보다 명료한 조작적 개념정의 를 통해 치안과 경제성과에 대한 분석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치안과 경제·복지 간의 연구 중에서는 특히 지역경찰과 복지의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치안과 복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복지 분야는 사회발전 단계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무엇보다도 ‘안전한 삶’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치안과 복지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 단계에서는 치안과 복지를 매우 넓은 추상적 범주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현재 지역사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활동(지역치안)과 주민안전(안전복지)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현 가능한 치안과 복지의 상호관계라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복지적 측면에서의 치안은 지역주민의 체감안전과 안전복지로 연결하여 이른바 “복지치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연구에는 외국 연구 사례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보호(노인, 아동, 여성 안전 등), 청소년 보호(학생 안전), 재난 안전 등을 포함시켜 폭넓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경제(M=4.06)가 복지(M=3.94) 보다 높은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치안 역할의 확대에 따른 기대성과에서 만큼은 역으로 경제(3.83) 보다 복지(4.11)에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즉 현 단계에서는 복지가 경제 보다는 치안과의 관련성이 다소 적지만, 향후 경찰활동을 통해 성과가 제고될 여지가 많은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복지라는 것이다.

둘째, 치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가 착수되어야 한다.

치안산업 분야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경비산업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 규모의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 부분에서 경찰의 장비·시스템 제조·개발과 관련한 치안산업의 발전은 향후 위와 같은 민간 보안경비산업의 시장 확대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치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가 착수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찰은 치안한류와 관련하여 해외 각국에 범죄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여타 범죄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 경비산업 분야에서 방법관련 장비 수출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바, 향후 치안한류에서 촉발된 대외적 분야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내적으로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조사서비스 제도가 실시될 경우 민간조사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장비 산업 등 관련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급효과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³⁵⁾

전반적으로 경찰 등 공공부분의 치안산업 자체가 유발하는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분석 외에, 민간부분의 구체적인 산업별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 인력배치 등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치안산업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에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선행 연구사례를 보면, 동 산업이 여타 산업경제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GDP 창출 및 고용창출 효과, 타산업과의 연관관계 등을 분석해 내고 있다.³⁶⁾

이 연구에서는 2009년 산업연관표 및 2011년 지식재산서비스업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에서 지식재산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분류를 추출하였으며, 총 29개 대분류 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5) 우리나라 민간조사 시장은 합법화 직후 단기적으로 4,877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과 같이 GDP 대비 0.1% 수준까지 성장할 경우 그 매출은 1조 2,724억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제도 도입 후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보면, 동 산업 취업유발계수(2010년, 11.5)를 적용할 때 취업유발효과는 5,609명으로 추정되고, 민간조사업이 장기적 성장 단계(매출액 1조 2,724억 규모)에 접어들 경우 약 14,633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웅, 민간조사 법제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3호, 2014, 381-414쪽.

36) 김상기·임효정,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2014.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산업연관표 내 추가(아래 산업 부문명 29번) 및
생산유발계수 추정사례]

〈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번호	산업 부문명	총투입액	중간투입률	순위	생산유발효과	순위
1	농림수산물	51,047,744	47.9%	23	1,874	18
2	광산품	3,726,594	41.5%	27	1,731	21
3	음식료품	93,875,467	74.6%	7	2,128	8
4	섬유, 가죽제품	46,386,247	70.2%	14	2,049	12
5	목재 및 종이제품	25,204,556	72.5%	11	1,997	14
6	인쇄, 출판 및 복제	8,086,906	61.1%	18	2,078	10
7	석유, 석탄제품	106,507,881	79.7%	4	1,170	33
8	화학제품	188,104,240	79.9%	3	2,039	13
9	비금속광물제품	33,208,845	69.6%	15	1,926	15
10	제1차금속	176,563,081	85.2%	2	2,353	4
11	금속제품	66,648,530	73.0%	10	2,457	2
12	일반기계	96,105,209	73.8%	9	2,374	3
13	전기및전자기기	268,917,851	78.9%	5	1,923	16
14	정밀기기	15,234,025	74.5%	8	2,104	9
15	수송장비	182,090,083	76.2%	6	2,294	5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17,595,757	71.8%	12	2,242	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64,691,418	71.0%	13	1,483	31
18	건설	188,450,346	59.9%	19	2,129	7
19	도소매	136,823,549	41.6%	26	1,678	22
20	음식점 및 숙박	76,994,381	62.0%	17	2,065	11
21	운수 및 보관	101,594,834	62.5%	16	1,593	26
22	통신 및 방송	57,504,467	55.8%	20	1,867	19
23	금융 및 보험	123,976,624	44.5%	25	1,734	2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8,072,345	32.1%	31	1,559	29
25	공공행정 및 국방	93,388,089	32.8%	30	1,561	28
26	교육 및 보건	168,686,861	33.7%	29	1,589	27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73,685,004	49.0%	22	1,908	17
28	기타	50,947,748	100.0%	1	2,828	1
29	지식재산서비스업	857,235	29.9%	-	1,491	-
	29-1 지식재산조사 및 분석	122,135	45.0%	24	1,616	25
	29-2 지식재산이전·거래 및 임대	91,259	29.7%	32	1,485	30
	29-3 지식재산변역	42,591	36.9%	28	1,660	23
	29-4 지식재산권설립 및 권리사업	564,950	24.9%	33	1,444	32
	29-5 지식재산시스템	36,300	49.0%	21	1,618	24
전 산업 (29개 산업) 평균		95,688,858	62.2%		1,939	

자료: 김상기·임효정,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2014, 228쪽.

동 연구는 이를 토대로 타 산업 대비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³⁷⁾

이러한 민간조사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사례를 참조하여, 치안산업을 산업연관표 상에 구현하고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치안과 경제·복지 추정 모형의 개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연구는 분야별 연구와 거시적(종합적) 연구의 병행, 치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착수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치안과 경제·복지 추정 모형의 개발이다.

본 연구의 추정 모형은 적어도 비교연구를 통한 보편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있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분석 틀과 자료 접근이 담보되어야 한다.

카우프만과 웨이(Kaufmann and Wei, 1999), 쉐슨(Svensson, 2005) 등이 지적하듯이 특정 국가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만, 서로 다른 정의와 방법론에 기초해 제도적 환경의 수준을 측정한 다양한 측정치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³⁸⁾

37) 김상기·임효정은 이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서비스업이 경제전체의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이는 이른바 ‘지식집약적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서비스업이 타 산업에 비해 전방연쇄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후방연쇄효과는 낮은 ‘수요의존형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일단 주요 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수들은 신뢰성이 높아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KDI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PRS Group에 의해 측정되고 축적된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와 IMF 등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법·질서 준수와 소득관계 자료가 사용 가능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상관관계 및 회귀분석모형을 개발하도록 한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G = b_0 + f(\text{법·질서 지수}) + b'X + u \quad \text{----- 1)}$$

단,

G= 총생산의 변화(예컨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b₀= 상수(constant),

f(.)= 각국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의 함수,

b'= 계수의 벡터,

X=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

u= 일반 가정들을 만족시킨다고 가정되는 오차항.

여기서 벡터 X에는 전통적 성장 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성장을 설명하는 여타의 변수들 즉, GDP, 해외투자, 국내투자, 인구, 수출입, 환율, 소비자 가격지수 등의 데이터는 *World Bank Database*,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8) D. Kaufmann and S. J. Wei, "Does "Grease Money" Speed up the Wheels of Commer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7093, 1999; J. Svensson,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9, No.3, 2005, pp. 19-42.

제4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경제와 복지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안의 역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치안과 경제, 치안과 복지 연구에 대한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양자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치안과 경제·복지에 관련된 실증연구물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아울러 향후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방향성 및 연구모형 탐색의 일환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영미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실증 연구사례를 보면, 그 연구 추세는 연구 초기에 단순히 범죄의 직접비용 또는 형사사법제도 운영비용 연구 등으로부터 기회비용 및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주의 연구, 더 나아가 가장 넓은 수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총량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가 발생시키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와 같이, 범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치안과 복지 분야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세계경제사적 발전 단계에서 볼 때,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비하여 전국민적 사회보장체계의 확산이 후행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안과 경제성장 관련 연구보다는 다소 양적으로 적고, 또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보다는 다소 이론적 연구에 치우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범죄에 대응한 치안과 경제·복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요 외국에서는 많이 시도되고 축적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교통비용 등 사회적 비용 연구 등 특정 분야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치안 여건이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관련 연구와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향후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방향성 및 연구모형 탐색의 일환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및 기대성과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치안과 경제·복지 양자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치안과 경제의 상관관계, $M=4.06$; 치안과 복지의 상관관계, $M=3.94$), 향후 경찰 역할의 확대에 따른 기대성과에서도 높은 기댓값을 보였다(치안과 경제 기대성과, $M=3.83$; 치안과 복지 기대성과, $M=4.11$).

특히 지역사회 복지성과에 대한 기대(4.11)는 경제적 성과에 기대(3.83)에 대비할 때 보다 더 높은 기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치안의 기대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복지가 경제 보다는 치안과의 관련성이 다소 적지만, 향후 경찰활동을 통해 성과가 제고될 여지가 많은 분야는 지역사회의 안전복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가들은 치안과 경제 또는 치안과 복지의 상관성 연구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4.42, 4.33의 평균

값을 보여 높은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치안 분야 중 경제성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중응답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정부패 등 공공범죄(23.1%), 그 다음으로 생활안전(18.5%), 지능범죄(13.9%), 국제성 범죄(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력범죄, 경비, 교통 등이 8-9%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안 분야는 극히 적은 비중을 보였다.

공공범죄 분야가 최우선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생활안전 분야와 지능범죄 분야는 우리사회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세탁/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 범죄가 지능범죄(13.9%)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개방형 경제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치안과 경제의 총량적 상관성 연구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치안총량 지표를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4.33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높은 개발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냈으며, 치안총량 지표 개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관련 경찰 기능들에 대해 이분형으로 처리된 다중응답 분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안전 분야로 나타났다(15.6%).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 등 공공범죄 분야(14.6%), 교통 분야(13.6%), 사기 등 지능범죄(13.1%), 강력범죄(13.1%), 자금세탁/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 범죄(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찰 기능들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치안이 경제적 성과라는 부분적 관련성 측면에서는 비록 공공범죄와 생활안전, 지능범죄, 국제성 범죄 등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치

안 총량지표라는 종합적 지표 개발에서는 경찰의 전반적 기능들이 균형적으로 포괄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치안 인프라 소요 재원 조달과 관련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평균값이 3.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필요없다(8.3%)는 소극적 의견들도 있고 그에 따라 전문가 간 편차(SD=1.230)도 치안총량 지표 개발 필요성 경우와 달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서 치안(목적)세 신설, 치안 펀드 조성 등의 연구에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향후 본 실증분석의 전체적인 방향은 ① 분야별 연구와 거시적(종합적) 연구의 병행, ② 치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착수로 생각되며, 특히 분야별 연구 중에는 지역경찰과 안전복지에 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치안과 경제·복지 추정 모형의 개발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분석 틀과 자료 접근이 담보됨으로써 연구의 보편성과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별 SOC의 유형구분 및 재정규모 조사연구, 2012.
- 박경래 외,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명출판사, 1999.
-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 차문중,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173호, 2007.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2016. 4.
- 한국개발연구원,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 7.

2. 논문 및 기타

- 김상기·임효정,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2014.
-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논총, 치안정책연구소, 2008.
- 정웅, “민간조사 법제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3호, 2014. 8.

정웅, “한국 민간조사업의 전개와 법제화: 일본 탐정업으로부터의 함의”, 한국경영사학회 국제학술대회(일본 동경, 2014. 9. 12-13) 발표논문, 2014. 9.

조경엽 외,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연구원, 2008.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Brand, Sam and Robert Price,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Home Office Research Study 217, Home Office, London (UK), 2000.

Damon Jones et al., *The Economic Return on PCCD's Investment in Research-based programs: A Cost-Benefit Assessment of Delinquency Prevention in Pennsylvania*, The Prevention Research Center for the Promotion of Human Developmen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8.

Eide, Erling, Rubin, Paul H., and Shepherd, Joanna M., *Economics of Crime*, Hanover: now Publishers Inc., 2006.

Pickett, K.H. Spencer and Jennifer M. Pickett,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nd Control*,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2.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2. 논문 및 기타

Afterschool Alliance, “Afterschool Programs: Keeping Kids and Communities Safe”, *Issue Brief*, No. 27. Washington, D.C. 2007.

- Ali, Abdiweli M. & Willam Peek, “Determinants Of Crime In Virginia: An Empirical Analysis”, *Contemporary Issues in Education Research*, Vol. 2, No. 4, 2009, pp. 1-11
- Anderson, David A., “The aggregate burden of cri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2, No. 2, 1999, pp. 611-642.
-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 Cárdenas, S. Mauricio, “Economic Growth in Colombia: a reversal of fortune?”, Working papers series-documentos de trabajo, 2007.
- Claudio Detotto and Marco Vannini, “Counting the cost of crime in Italy”, *Workshop on Applied analyses of crime: Implications for cost-effective criminal justice policies*, Porto Conte Ricerche, 26 October 2009.
- Colvin, Mark, Francis T. Cullen & Thomas. V. Ven, “Coercion, Social Support, and Crime: An Emerging Theoretical Consensus”, *Criminology*, Vol. 40, No. 1, 2002, pp. 19-42.
- Detotto, C. & E. Otranto, “Does Crime Affect Economic Growth?”. *Kyklos*, Vol, 63, No, 3, 2010, pp. 330-345.
- Ehrlich, Isaac,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3, 1973, pp. 521-565.
- Gaibulloev, Khusrav and Todd Sandler, “Growth Consequences of Terrorism in Western Europe”, *Kyklos*. Vol. 61, No. 3, 2008, pp. 411-424.
- Goodrich, J. N., “September 11, 2001 attack on America: a record of the immediate impacts and reactions in the USA travel and tourism industry”, *Tourism Management*, Vol. 23, 2002, pp. 573-580.
- Kaufmann D. and S. J. Wei, “Does “Grease Money” Speed up the Wheels

- of Commer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7093, 1999.
- Liou, K. T. & E. G. Savage, “Citizen Perception of Community Policing Impact”,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0, No. 2, 1996, pp. 163–179.
- Maslow, A,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50, No. 4, 1943, pp. 370–396.
- McCollister, K. E., French, M. T., & Fang, H., “The cost of crime to society: New crime-specific estimates for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 108, No. 1, 2010. pp. 98–109.
- Peak, Ken, Bradshaw, R. V. & Glensor, Ronald W., “Improving citizen perceptions of the police: “Back to the basics” with a community policing strateg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0, Issue 1, 1992, pp. 25–40.
- Petter, Gottschalk,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Journal of Financial Crime*, Vol. 17, No. 4, 2010.
- Sjoquist, D. L., “Property Crime and Economic Behavior: Some Empirical Resul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No. 3, 1973.
- Sönmez, S. F., & Graefe, A. R., “Influence of Terrorism Risk on Foreign Tourism Deci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5, No. 1, 1998, pp. 112–144.
- Svensson, J.,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9, No. 3, 2005, pp.19–42.
-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Economy & Growth),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6. 10. 1 검색)